광주시 실·국장급 인사

광주시는 29일 정선수 정책기획관을 사회복지국장으로,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하는 등 광주U대회조직위 파견과 명예퇴직 등에 따른 국장·준국장급 21명에 대한 인사를 2월1일자로 단행했다.

준국장급인 의회의사담당관에는 김남호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투자유치기획단장에는 박창기 총무과장, 감사관에는 기원건 예산담당관이 감사관으로 각각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또 노희용 문화수도정책관이 공보관으로, 서동진 의사담당관이 문화수도정책관으로 발령됐다. 유광종 사회복지과장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신임 실·국장 프로필

문봉주 문화체육정책실장 책임감이 강한 간부로 정평이 나 있다. 서구, 남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리 없이 업무를 추진했다. ▲화순(59) ▲성균관대학교 ▲환경녹지국장 ▲도시교통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선수 사회복지국장 꼼꼼하게 일을 마무리한다. 투자유치기획단장 시절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광주(56) ▲호남대행정대학원 ▲기획관리실 기획관 ▲경제정책과장 ▲투자유치기획단장

최현주 자치행정국장 상하에서 두루 의견을 들어가며 업무를 처리해 신망이 두텁다. 경제산업국과 환경녹지국을 이끌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화순(58) ▲조선대 ▲경제산업국장 ▲환경녹지국장

양회주 환경녹지국장 꼼꼼한 일처리와 강인한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기획통. 총무과장과 정책기획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다. ▲화순(58) ▲광주대 ▲총무과장 ▲동구 부구청장 ▲정책기획관

장상근 건설교통국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새로운 업무를 발굴·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보성(57) ▲조선대 산업대학원 ▲재난관리과장 ▲건축주택과장 ▲문화수도지원과장

강왕기 도시마케팅본부장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외유내강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재직 당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무난하게 확정했다. ▲곡성(57) ▲전남대 행정대학원 ▲투자유치기획단장 ▲감사관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1973년 공직에 입문, 토목직으로 잔뼈가 굵었다. 대규모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등 업무 추진능력에서 인정을 받았다. ▲광주(55) ▲광주대 ▲지하철건설본부 부장 ▲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보관을 맡아 무난하게 처리했다. 줄곧 총무 업무만을 볼 정도로 조직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 ▲광주(55) ▲호남대대학원 ▲광산구 총무국장 ▲재난관리과장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문 인 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고시출신으로 3년 동안 최장수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했다. 성실성과 책임감 등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했다. ▲영광(52) ▲전남대대학원 박사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국장 ▲북구 부구청장

신광조 비엔날레사무처장 기획력과 국제감각, 창의성을 두루 갖춘 도시행정가. 도전적인 업무추진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 ▲해남(53)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대학원 ▲기획관 ▲도시마케팅 본부장 ▲서구 부구청장

이기신 서구부구청장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장성(57) ▲방송통신대학교 ▲(재)비엔날레 사무처장 ▲도시마케팅본부장

정재현 남구부구청장 꼼꼼하면서도 조용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부이사관 승진 후 첫 보직으로 부구청장을 맡았다. ▲광주(57) ▲전남대행정대학원 ▲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예산담당관 ▲감사관

홍기남 U대회기획본부장 차분하고 섬세한 스타일. 중앙부처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U대회 성공개최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함평(58) ▲조선대대학원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과장 ▲남구 부구청장

문금주 정책기획관 대중교통과장 당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주도했으며 감사관으로서 단기간에 광주시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광주(43) ▲조선대 ▲기획관리실 기획관 ▲대중교통과장 ▲감사관

정부, 새만금 25㎢에 관광·레저지구 개발

J프로젝트 어쩌나

투자·관광객 유치 차질 우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 계획이 상당 부분 J프로젝트 구상과 겹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제 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입, 새만금을 산업·관광·레저·국제비즈니스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명품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전체 면적의 23.8%(67.3㎢)를 관광·레저(24.9㎢),국제업무(5.0㎢), 외국인직접투자(FDI) 산업 용지(20.3㎢) 등 5개 권역으로 특화해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에 버금가는 '명품 허브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전남도의 J프로젝트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J프로젝트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권역(그린카, 생태환경 복합단지) ▲녹색산업권역(에너지 생산 및 주거) ▲미래융합기술산업권역(환경관련 융·복합시설) ▲국제업무권역(국제비즈니스, 컨벤션,숙박) ▲레저·생태권역(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골프장) 등으로 특성화한 새만금 명품도시 구상은 J프로젝트 대상 용지의 개발용도와 큰 차이가 없다.

영암과 해남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J프로젝트의 경우 4개 지구에 골프장, 콘도·리조트 등 숙박단지, 바이오산업단지, 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센터, 마리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 더욱이 새만금은 같은 서해안고속도로 축에 있는데다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새만금과 J프로젝트가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 등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 J프로젝트가 이미 개발계획 승인 이후 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실시계획 수립,실제 개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새만금 계획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도 "새만금의 종합실천계획을 분석,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순익 사상 첫 1조 돌파

내수 호조·환율상승 영향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내수판매 호조와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기차아 광주공장은 주력 차종인 쏘울 32만3천여대를 생산해 국내 2만2천여대, 수출 9만9천여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이같은 실적을 견인했다.

기아차는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고 2009년 국내외에서 114만2천38대를 팔아 매출 18조4천157억원, 영업이익 1조1천445억원, 당기순이익 1조4천5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7배, 당기순이익은 무려 12.7배 늘어났다.

글로벌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특히 신차효과와 노후차 세제지원의 영향으로 내수판매가 2008년보다 30.5% 상승했다.

영업이익률도 6.2%로 전년(1.9%) 대비 4.3%포인트 높아졌으며, 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1조730억원 줄어드는 등 재무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기아차는 4분기(10~12월)에만 ▲판매 35만2천285대(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매출 5조7천275억원(13.6%↑) ▲영업이익 4천118억원(1천47.1%↑) ▲당기순이익 6천39억원(707.7%↑) 등을 기록했다.

올해 판매 목표는 국내공장 127만대, 해외공장 67만대 등 지난해보다 26.5% 증가한 총 194만대를 제시했으며, 매출은 22.2% 늘어난 30조6천420억원(국내 19조6천550억원, 해외 10조9천87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12월 광공업 생산 소폭 하락

광주·전남 지역의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

2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2월 중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6% 증가했으나, 전달보다는 2.8% 감소했다. 전남도도 28.4% 상승했지만 전달보다는 0.2% 감소했다.

광주는 자동차(48.6%)를 비롯한 전자부품 및 영상 음향통신(60.3%) 분야가, 전남에서는 화학제품(37.0%), 금속가공업(121.6%)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광주에서는 금형, 산업용 냉장고 등 기계장비(-14.3%), 전남에서는 철강 유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 부문(-14.9%)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 재고는 자동차(-44.3%), 고무 및 플라스틱(50.4%), 섬유제품(-49%)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도 1차금속(-54.9%), 고무 및 플라스틱(28.9%) 부문 재고 감소로 전체적으로 18.8% 하락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연봉 10억 '슈퍼 월급쟁이' 광주 8명

1,124명중 서울·경기 92%…전남은 한명도 없어

연봉 10억원이 넘는 '슈퍼 월급쟁이'가 전국적으로 1천명이 넘고 이 중 92%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8명에 그쳤고, 전남에는 1명도 없었다.

고소득 전문직 못지않은 이들 초고액 연봉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금융 · 보험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1천124명에 달했다. 이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기 이전 수준이다.

총급여가 5억~10억원인 근로자가 3천115명이고 3억~5억원 6천379명, 2억~3억원 1만3천514명, 1억~2억원 17만807명 등이다. 1억원 초과 연봉자는 19만4천93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 수준이다. 주로 대기업 임원 등 고위직에 있는 경우다.

전체 급여가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450만3천432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6.3%였다. 이들 중에는 연중에 직장을 옮긴 이직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 월급쟁이는 지역별로 서울 거주자가 86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는 전체의 92.5%에 달했다.

다음으로 부산 23명, 경남 16명, 대구 11명, 광주, 울산, 충남 각 8명, 인천 4명, 대전, 충북 각 3명, 전북 2명, 경북, 제주 각 1명이었다.강원과 전남은 슈퍼 월급쟁이가 2명씩 있었지만 2008년에는 0명이 됐다.

/연합뉴스

사 설

'잿밥'에만 신경쓰는 도의원들 자질 있나

전남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빌미로 회의에 무더기로 불참해 19~28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거듭했다고 한다. 지난 19일 열린 1차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회의 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등 의정 공백사태를 빚었다는 것이다. 25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의원 10명 중 6명이 불참하고, 이들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F1대회 지원특별위원회에는 10명 가운데 3명만이 자리를 지켜 의정활동은 뒷전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농수산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건설 소방위원회 등은 이틀 일정으로 처리할 조례심사·업무보고 등의 안건을 단 하루 만에 몰아치기로 처리했다고 한다. 도의회는 28일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감했으나 폐회식에는 전체 의원 50명 가운데 36%인 18명이 불참해 '의회 무용론'마저 낳고 있다.

도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는 무엇보다 자질문제가 크다.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나 본연의 의정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불참 이유를 지역구 활동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게 지역구 활동이라면 달리 도리는 없다. 그러나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눈도장을 찍혀야만 한다면 의원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일이다. 국회의원들도 직무유기를 하는 의원까지 감싸고 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역민이 이번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장애인 관리체계 이렇게 허술해서야

허술한 장애 진단서 발급체계와 사후관리를 악용해 정상인을 장애인으로 둔갑시킨 브로커와 '가짜 장애인' 등 6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는 현직 교사와 공사 직원, 전문지 기자 등도 포함돼 있는 등 가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정상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4명과 '대리 장애인' 11명, 의뢰인 42명, 소개자 3명 등 60명을 구속·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가짜 장애인이 양산되는 것은 각종 복지혜택 때문이다. 장애인이 되면 장애 수당·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적잖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짜 장애인으로 인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사이비 장애인에게 낭비되는 혈세만 제대로 관리해도 장애인 복지는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다. 가짜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울리고 있는 셈이다.

가짜 장애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장애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허위 진단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사후관리 역시 극히 일부 장애를 제외하고는 재판정을 받지 않는다. 한번 장애판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허술한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가짜 장애인을 근절할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 등록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멀쩡한 육신을 지니고 장애인 대열에 합류한 파렴치들이 더 이상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요타 '리콜' 전세계 1천만대 넘을 듯

가속페달 결함…국내서도 조사중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리콜 규모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만 800만대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로는 1천만대를 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전날 가속페달이 바닥매트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된 5개 차종 109만3천대를 리콜(무상 회수.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 모델은 2009-2010년형 코롤라·벤자·매트릭스와 2008~2010년형 하이랜더, 2009~2010년형 폰티액 바이브 등이다. 이는 작년에 리콜한 426만대와 같은 모델들로, 이렇게되면 가속페달 결함으로 리콜하는 차량은 모두 535만대로 늘어난다.

도요타는 지난 21일에도 가속페달 잠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된 8개 차종 230만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캐나다에서도 같은 문제로 47만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도요타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리콜하는 차량은 800만대가 넘는다.

여기에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리콜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모두 합하면 도요타의 글로벌 리콜 규모가 1천만대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도요타 차량을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미국 등에서 문제가 된 부품의 성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민등록 인구 이달말 5천만명 돌파

주민등록 인구에 거주불명 등록자(옛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돼 총인구가 5천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4천977만3천145명에 최근 10년간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9천여명이 포함됨으로써 총인구가 5천6만2천여명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건강보험 자격 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됐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